

# 북한의 생산현장에서 표출된 갈등에 관한 연구

## - 공업화시기를 중심으로 -

남 근 우

통일연구원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V. 공식 사회관계의 균열
II. 생산현장에 강제된 복종의 일상	VI. 맺음말
III. 야누스적 노동일상	참고문헌
IV. 노동일상에서 표출된 갈등의 양상들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 공식사회관계(Formal Social Relationship), 비공식사회관계(Informal Social Relationship), 노동일상(Daily Labour), 갈등(Complications), 복종(Obedience)

### 국 문 요 약

이 글은 공업화시기의 북한의 노동과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북한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던 생산관리자, 노동자, 농민 등 소위 보통 사람들의 행위를 복원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연구는 위계적인 명령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와 통제 시스템에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북한 주민들은 행위의 취사선택 가능성을 사상당한 체제의 의지와 목적에 무조건 복종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생산현장의 노동일상은 체제의 의지가 철저하게 투영되는 수동적인 영역만은 아니다. 일상은 상부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다양한 행위주체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행위주체를 둘러싼 현실적 조건들에 의해 다양한 행위가 표출되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다. 따라서 노동과 삶의 일상에서 행위하는 북한 주민들은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수동적인 행위자에 머물지 않고 행위를 취사선택할 줄 아는 능동적인 행위자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노동행위들은 이미 공업화시기부터 생산현장 곳곳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I. 문제의 제기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체제일탈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체제일탈 행위들은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에서부터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이르기까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로 현재 북한사회의 기강은 많이 해이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견고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으로 무장된 체제의 폭력성 때문에 정치적 혹은 물리적인 저항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정치적이거나 혹은 물리적인 저항이 없었다고 해서 과연 생산현장에서는 아무런 갈등과 저항 없이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수행하였는가? 노동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행위의 취사선택 가능성을 사상당한 채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수행하는 수동적인 행위자에 불과한가?

최근 북한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책이나 제도 중심의 거시담론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노동 일상에서의 다양한 권력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sup>1)</sup> 이처럼 미시적 수준에서 북한연구의 질적 향상이 도모되고는 있지만 공업화시기의 구체적인 노동 일상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상을 어떻게 규정할지 그리고 일상이 북한체제를 독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일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일상은 개인의 사생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위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제도화되고 집단적 제도가 객관적인 역사의 동력으로 작용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일상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하랄트 데네 2002, 191). 이런 측면에서 공업화시기에 북한의 생산현장에서 표출되었던 다양한 노동행위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들의 집단적 제도화가 북한체제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공업화시기의 생산현장 속에서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행위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출현했고 그것이 북한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업화시기에 생산현장에서 표출된 다양한 노동행위에 대한 연구는 정치영역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일정부분 벗어나야 가능할 수 있다. 흔히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정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유일체제’(이종석 2000) 혹은 ‘수령제’<sup>3)</sup>이다. 이 개념들은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sup>4)</sup>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로 북한을 분

1)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홍민(2006); 김종욱(2007); 조정아 외(2008); 차문석(2007); 정건화(2007); 남근우(2008). 이외에도 북한 노동 일상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차문석(2008)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2) ‘일상’의 개념은 M. 마페졸리·H. 르페브르(2002); 조정아 외(2008, 5-12) 참조.

3) 스키 마사유키는 북한체제를 당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추대한 북한의 독특한 체제로 규정했다(스키 마사유키 1994, 268). 이외에도 북한체제를 수령제로 규정한 연구들로는 김광용(1995); 김연철(1995); 최성(1997); 정우곤(1997); 김연각(2006) 등이 있다.

4)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란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를 말한다(철학사전 1985, 388).

석하게 되면 북한은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와 명령이 갈등을 수반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수행되는 사회로 간주되기 쉽다. 즉 북한은 공식 사회관계로 작동되어 왔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북한 주민들은 행위의 취사선택 가능성을 제거당한 채 오로지 최고 지도자와 당의 명령을 법적,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수행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비춰질 수 있다. 이처럼 정치영역에 대한 과잉 분석은 일상의 영역을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의도에 철저히 종속된 수동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일상에서 노동과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식 언술과 거시담론 등 ‘위’에서의 행위방식에 대한 관심을 보통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돌려본다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사회상이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노동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탐색은 북한의 공식적인 작동 메커니즘의 현실과 실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미시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의 생산현장은 체제의 의지가 철저히 집행되는 수동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다. 위의 지시와 명령은 아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그것은 북한에도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사람들의 행위를 복원시킬 때 북한의 공식적인 작동 메커니즘의 현실과 실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 노동 일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볼 것인가 하는 기법의 문제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접근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차문석(2008, 166-179)은 접근기법으로 문헌분석 기법과 구술분석 기법으로 구분하였고, 접근방법은 아래로부터의 접근, 인류학적 접근, 생애사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이 글은 차문석의 방법론을 참고해 문헌분석과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통해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sup>5)</sup>

북한의 공식문헌은 비록 선전선동용어기는 하지만 명령과 계획이 작성되고 하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의 결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과 저작물에는 지시와 명령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시’로 제시하고 있어 북한체제의 전반적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문헌은 서술내용의 추상성이 지나치게 높아 서술내용이 실제 현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식문헌이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문제의 원인과 제도적 해결방안을 실제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밖에도 공식문헌에서 지적된 문제를 북한의 일반적인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가 하는 일반화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의 공식문헌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소설과 수기도 활용한다. 소설과 수기에서 확인된 내용을 김일성, 김정일 및 각종 공식문헌과 비교해 그 현상과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복원하고 해석할 것이다. 문학작품에서 묘사된 갈등은 단순히 긍정과 부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부정을 반드시 타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5)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불가피하게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공업 화시기에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을 찾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의 나이가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 분석 기법과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선택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은 긍정에 의해서 설득되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어 구성원들 간의 단결이 강화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부정인물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인물이 표현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이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작품은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1차 자료이다.

## II. 생산현장에 강제된 복종의 일상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식민지 경제의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대부분의 경제자원들을 파괴당하였다. 공업 총생산액만 놓고 보더라도 1949년에 비해 무려 40% 이상 감소하였다(김일성 1980, 172). 전쟁은 북한에게 파괴된 경제기반을 신속하게 복구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당면과제로 남겼다. 공업화 없이 혁명은 불가능하였다. 혁명은 주민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마련해 줄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1981a, 512) 역시 사회주의 공업화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은 소비를 억제해 획득한 잉여자본을 중공업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었다. 축적과 집중을 통한 공업화 전략은 시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시장을 통해서 체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경제자원을 동원하고 투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 북한에서 형성된 위계적 명령체계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행위를 체제의 의도와 목표에 복종시킬 필요성에서 출현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과 일상의 모든 인간행위와 사회관계는 공식조직 내에서 건설과 증산이라는 체제의 목적을 수행하게끔 의도적으로 규제되고 강제되었다. 전후 공식 사회관계가 형성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다.

공식 사회관계 속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생산지시와 명령을 거부하고 정치적으로 혹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표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위계적인 명령체제로 사회를 재조직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얽어매놓은 감시망과 통제기제로 정치적인 저항은 사전에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체제의 억압적인 강제기제가 두려워 순순히 복종한 것만은 아니었다.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새롭게 형성된 지배-피지배 관계 때문이기도 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지시자와 수행자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배-피지배 관계였다. 이러한 관계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약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지배-피지배 관계는 시장경제체제에서처럼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매개로 한 계약상의 관계가 아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는 소비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과 사회적 편익을 모두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장이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계약상의 종속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는 직장이동을 법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복리후생은 최종적

으로 생산현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생산관리자는 사회적 혜택을 최종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산관리자의 지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어려웠다.<sup>6)</sup> 왈더(Walder 1986, 10)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러한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ism)로 정의하였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이러한 신전통주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다.<sup>7)</sup> 따라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공식 사회관계에 정치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저항을 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것은 법적 처벌과 함께 생산현장에서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혜택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복종 메커니즘은 복종을 도덕적으로 규범화한 노동문화이다. 생산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과 증산을 체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의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노동문화는 생산현장과 일상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규범으로 포박하는 것이었다. 공업화시기 북한의 노동문화는 법률적 강제와 도덕적 규범이 혼재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문화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생산현장에서 국가재산을 등록, 실사, 보관,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경제관리질서를 강하게 통제하였다. 북한에서 경제관리질서의 강화는 ‘기업관리의 정규화’로 일컫어진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계획화, 자재공급, 설비관리, 생산지도, 노동행정, 재정관리 및 후방사업 등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통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공동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집단주의적 생활습성을 배양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해 경제부문별로 모범 공장을 선정해 그 경험을 일반화하였다. 북한은 모범 공장의 사례를 모든 공장과 기업소로 하여금 따라 배우게 해 생산현장에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김정희, 1971: 46-50).

둘째, 엄격한 생산관리규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의식과 노동일상을 도덕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노동의 도덕화를 위해서는 노동과 일상의 전범이 되는 규범을 설정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기제가 필요하였다. 북한에서 노동행위의 도덕적 규범화는 ‘문화도덕생활’로 표현되었다. 문화도덕생활은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도덕규범들을 없”앤 “공산주의적 도덕규범”(정치사전 1973, 585)으로서 공산주의 생활윤리이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생활윤리는 집단생활윤리, 조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생활윤리, 동지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생활윤리, 가정생활윤리, 사회공동생활윤리, 일상생활윤리 등 모두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가지의 생활윤리는 노동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도덕규범으로서 강조되었으며, 공산주의 생활윤리의 최고표현은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으로 강조되었다.<sup>8)</sup>

북한은 도덕적으로 규범화된 행위기준을 정형화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6) 베버(Weber 1981, 10)에 의하면, 물질적 재화의 처분권이나 경제적 권력은 지배의 가장 중요한 일상적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당 간부들은 생산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새로운 착취계급으로 될 수 있었다(Djilas 1957).

7) 조윌(Jowitt 1992) 역시 신전통주의를 모든 사회주의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파악한다. 박형중(2002)도 북한에서의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신전통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8) 여섯 가지의 생활윤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경숙(1990, 118-247) 참조.

갖도록 강제하였다. 노동과 일상에서 규범화된 도덕적 생활방식은 ‘의무’를 넘어서 ‘양심’이 강조되는 책임의식이었다. 즉,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생산과제를 무조건 완수하고 더 나아가 초과 완수할 것을 당연시 하는 양심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도덕이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생활방식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과 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생활방식의 강요로 표출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업화시기 생산현장은 억압적 강제기제, 신전통주의 그리고 노동문화로 강하게 구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혹은 물리적인 저항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 Ⅲ. 야누스적 노동일상

공업화시기에 북한체제가 공식 사회관계로 재편됨에 따라 정치적 혹은 물리적으로 저항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은 제도적으로 봉쇄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공간이 봉쇄되었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공업화시기는 김일성이 1970년 11월에 개최된 제 5차 당 대회에서 1957년부터 시작된 공업화가 불과 14년 만에 달성되었다고 선언할 만큼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이다(김일성 1983d, 235-236). 이처럼 짧은 기간에 공업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전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희생과 강제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만큼 생산현장에서의 갈등 역시 압축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업화의 시기에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회주의 연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의 대도약기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소련의 경우에도 강도 높은 노동과 과중한 생산과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의 행위가 존재하였다. 1949년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중국 역시 명령과 시행의 공식 국가체제가 생산현장에서의 저항에 의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Filtzer 1986, 1992).

북한 역시 생산현장의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조건들이 노동행위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에 자재, 원료 그리고 노동력이 ‘제때’ 그리고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부문별로 계획된 생산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북한의 생산현장은 생산자원을 제때,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였다. 노동력 역시 김일성(1983c, 342)이 1974년이 되어야 노동력 수급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예상할 만큼 만성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은 부족한 생산자원을 자력으로 확보해 높은 생산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받았다. 노동자들 역시 끊임없는 증산과 혁신을 통해 생산기록의 갱신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노동조건 속에서 생산관리자와 노동자들은 당과 상부의 과도한 생산지시에 무조건 복종하지만은 않았다. 건설과 증산이라는 체제의 목적의식이 투영된 공식 사회관계 속에서의 노동으로는 강요된 건설과 증산의 요구를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불복종은 생산지시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방식이 아닌 그것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체제의 폭력성과 통제시스템, 신진통성 그리고 노동문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표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선, 생산관리자들은 생산정보를 왜곡하거나 생산자원을 고의적으로 비축 혹은 낭비하였다. 정보의 왜곡현상은 공급 부족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생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생산자는 더 적은 생산과제를 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반해 계획자는 더 많은 생산과제를 부과하려 하였다.<sup>9)</sup> 정보의 왜곡현상은 부족경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간의 생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성은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 생산계획을 되도록 적게 받기 위하여 성이 관리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올라오는 계획지표를 낮게 보고하였다. 김일성(1982, 510-511)은 1964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국가계획기관과 생산자 간의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관리자 입장에서는 수행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계획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왜곡과 함께 생산자재를 필요 이상으로 비축하고 있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생산자재의 비축현상은 정작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생산현장에서는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계획을 월말, 분기말, 연말에 돌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낭비를 초래하였다(김원석 1980, 43). 이밖에도 생산관리자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속도를 높이려는 노동자들의 노동의지를 좌절시키기도 하였다.<sup>10)</sup> 생산관리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당과 상부로부터 과도한 생산계획이 하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원으로만 계획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들 역시 임금과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높이려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생산현장의 생산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혁신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자신에게 초래될 불이익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혁신에 성공할 경우 초래될 생산목표량의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의 변화 역시 일반 노동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노동행위에서 회피하게끔 만들었다. 이와 같이 생산현장의 노동조건은 기술혁신을 시도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동의지를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비혁신 노동자들은 혁신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 가치에 순응할 것을 강제하였다. 노력영웅을 꿈꾸는 혁신 노동자들의 충성스러운 노동행위로 인해서 노동 강도가 더욱 세지고 더 많은 생산과제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혁신을 시도하려는 일부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생산현장의 강제력에 의해 노동의지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노력영웅을 꿈꿨던 노동자들은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대다수 노동자들에 의해 포위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나타난 신진통성과 노동의지의 상실은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노동행위

9) 부족경제가 사회주의 국영기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코르나이(Kornai 1992, 122-123)에 의하면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에 보다 많은 계획과제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하부기관은 보다 쉽고 적은 계획과제와 계획수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입자재를 요청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생산현장의 생산정보를 왜곡 보고해 적은 계획과제를 받아 오는 생산관리자가 유능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부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10~20% 상회하는 계획을 부과한다고 한다.

10) 자세한 내용은 IV장 참조.

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북한체제가 특수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생산현장은 항상 당과 상부로부터 ‘공칭능력’<sup>11)</sup>을 초과하는 과도한 생산목표를 부여받았다. 생산현장은 생산 자원의 부족과 관료주의적 사업지도 탓에 주어진 생산과제를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현장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산현장과 관리자에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현장이 맞닥뜨린 현실은 노동자들의 행위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복종이나 아니면 저항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어떤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산현장의 현실에 순응해 관리자의 지시에 복종하였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현실의 벽을 뛰어 넘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혁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혁신의 길을 선택한 노동자는 당의 지시와 명령에 충성하는 노동자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생산현장에서 표출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저항은 바로 생산현장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노동자들 간의 상반된 인식에 기초한다.

#### IV. 노동일상에서 표출된 갈등의 양상들

구체적으로 생산현장에서 표출되었던 생산관리자와 혁신 노동자, 혁신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생산관리자와 혁신 노동자 간에 존재하였던 갈등의 지형은 기술혁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 노동자들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지만 생산관리자들은 이들의 기술혁신을 생산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무시 혹은 묵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례로 길주팔프공장의 경우 노동자들이 창의고안을 만들어도 화학공업상은 공장에 내려가 보지도 않고 노동자들의 제안을 묵살하였다고 한다(김일성 1984a, 308).<sup>12)</sup>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 김일성(1984b, 554)은 “남의 의견을 끝까지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서 꺾어버리거나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지만 관리자들이 기술혁신을 무시하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생산관리자들은 공칭능력의 한계를 노동자들에게 강조해 기술혁신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생산관리자 입장에서 생산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술혁신만으로 늘어난 생산과제를 떠안는다는 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효과가 명백할 경우에도 공칭능력의 한계를 노동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sup>13)</sup>

생산관리자가 혁신 노동자들의 기술혁신에 소극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생산현장의 현실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이 창의고안을 제안할 경우 생산현장의 책임자는 그것을 실험해야만 한다. 이

11) 공칭능력이란 생산설비가 지닌 최대한의 생산능력을 의미한다(경제사전1 1970, 149).

12) 노동자의 창의고안을 무시하는 경향은 다음의 소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리석형(1962, 132; 1969, 83); 장춘옥(1979, 131).

13) 북한 소설 「한계점」을 보면 작업반장이 농장에서 500마리의 양을 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한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주인공 랑림이 비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강태정(1977, 14-22).



럴 경우 직접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실험과정에 원료, 자재,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의 실험으로 기술혁신의 효과가 명백하다면 창의고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번 실험해야 된다면 그 자체로 생산관리자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유희 생산자원이 부족한 생산현실에서 생산관리자가 창의고안에 대한 실험을 하다 실패할 경우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14)</sup> 생산관리자가 노동자들의 창의고안에 소극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기술혁신에 성공할 경우 상부로부터 더 많은 생산과제가 하달되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의한 계획과제의 달성은 다음연도 계획 작성의 근거로 작용해 생산현장에 계획과제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술혁신의 효과가 명백할 경우에도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창의고안이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관리자의 행위에 대해 혁신 노동자들은 상부기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하곤 하였다. 북한에서는 공업화시기부터 이미 상급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당과 상부기관에 부당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민원제도로서 ‘신소제도’<sup>15)</sup>가 있었다.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크게 창의고안이 배척당할 경우,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원료가 제때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배급 상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신소는 당 조직지도부 신소과나 내각 신소부에서 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노동자들은 김일성에게 직접 신소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무연탄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4층과 5층에는 수도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김일성에게 직접 신소편지를 보냈다고 한다(김일성 1983b, 563-564). 그러나 신소제도는 오히려 생산관리자와 노동자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해남도의 한 농민은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에 신소편지를 보냈다가 오히려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김일성 1984c, 28). 이와 같이 신소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을 두려워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신소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에 소극적이었던 일반 노동자들 역시 혁신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곤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노동에 대해 무임승차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도급임금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도급임금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도급임금제는 공업화시기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

14) 생산관리자의 이러한 태도는 소설 「혁명 소조원 김동무」에 잘 묘사되어 있다. 정창운(1983, 7).

15) 신소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때 대하여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시하는 인민들의 요구”로 정의된다(조선말대사건 1992, 1916). 북한에서는 특별한 법 규정 없이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신소과를 설치하였고, 지방의 경우 지방 당 위원회에 신소처리 담당자를 두고 민원을 처리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 120호’로 ‘신소·청원법’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69조에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었다. ‘신소·청원법’은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83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자재공급체계의 혼란으로 월말, 분기말, 연말에 생산을 ‘돌격식’으로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생산현실 때문이었다. 돌격식 생산방식은 노동일수에 따른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데 장래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임을 산출하기가 어려웠다. 도급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은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이나 기술혁신을 기피하려고 하였다. 힘든 노동에 참여하거나 기술혁신을 하지 않아도 기본임금은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 상품공급체계의 혼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이룩한 대가로 물질적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도 상점에는 소비품이 부족하였다. 북한은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 등 정규 보수지급 방식 이외에도 물질적 인센티브로서 공업부문에서는 점수에 의한 분배방식<sup>16)</sup>, 건설부문에서는 ‘현물평가제’<sup>17)</sup>, 농업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우대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계획을 초과 달성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도 정작 상점에는 물건이 턱없이 부족해 필요한 소비품을 사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일성은 상점에 질 좋은 소비품이 부족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김일성(1983a, 29-30)은 농촌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농민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상점에 질 좋은 상품이 없다보니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셋째, 기술혁신의 성공이 초래할 노동 강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이 성공할 경우 생산현장에는 성능이 향상된 기계의 사용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당연히 다음해 생산과제는 당해 연도에 비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갱신된 생산기록은 다시 갱신해야 할 목표로 작용한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계획과제의 100% 달성을 넘어 그 이상의 초과완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은 노동의 강도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다.

넷째, 노동자가 기술혁신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설 『용해공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현대홍은 출선시간을 단축하는 데서 공칭능력을 깨뜨린다고 그럴듯한 발기를 해 나섰었다. 그래서 용해공들과 기술자들이 모두 달라붙었는데 뜻밖에도 큰 사변을 겪게 되었다. 공칭능력은 고사하고 용광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사태를 빚어놓았다. 기술자들도 기를 잃고 온 체철소가 근심에 싸여 그의 시도를 단연코 막아 나섰었다. 그런데 오직 대홍이만은 반드시 된다고 억척같이 내뺏치는 바람에 성에서까지 과학자, 기술자들이 내려오고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 술한 용해공들과 기술자들이 위험 속에 얼마나 피어린 고생을 했으랴... 마침내는 법 기관에서까지 대홍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나서는데 이르렀다”(리택진 1982, 32-33).

『용해공들』은 기술혁신의 실패가 생산현장의 손실로 이어질 때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 노동자들은 기술혁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에 대한 소극성은 기술혁신을 시도하는 다른 혁신 노동자들과

16) 점수에 의한 분배방식에는 ‘작업반 체점제’, ‘작업반 내부채산제’ 등이 있다.

17) ‘현물평가제’는 노동자의 노동평가를 그들이 수행한 건설과제의 현물량과 질에 결부시켜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그 수행여부에 따라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 북한에서 현물평가제가 처음 도입된 기업소는 평양 동구지구 종합주택건설사업소이다(김성태 1965, 21-22).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혁신을 둘러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은 주로 기술혁신의 결과가 생산현장에 초래할 생산기간의 단축과 그로 인한 노동 강도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 노동자들과 대립하였던 일반 노동자들의 행위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노동자들은 혁신 노동자들이 제안한 창의고안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평산농기계작업소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산자재를 동료들에게 잘 나누어 주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동료 노동자가 제기한 창의고안을 경제적 가치가 크건 작건 간에 잘 도와주지 않으려고까지 했다고 한다(강성국 1963, 37). 이러한 비협조는 숙련공과 비숙련공과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숙련공은 창의고안이 생산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발생할 노동 강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비숙련공이 노력영웅이 되어 승진할 경우 초래될 노동자 간의 힘의 변화도 우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시 동구 주택건설 트레스트 제1 직장 천리마작업반에서 있었던 사례이다. 이 직장에서는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들 간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작업반 채점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고급 숙련공들은 이 제도를 몹시 싫어하였다고 한다. 작업반 채점제를 실시하면 개인의 작업량과 질 그리고 매일 매일의 생활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점수가 계속해서 낮게 평가되고 낮은 급수의 노동자가 높게 평가받을 경우 무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지위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최덕수 1963, 28-30).

둘째, 일부 노동자들은 고의적으로 기계를 파손시키기도 하였다. 구성방직공장 2중 천리마 고급순 작업반에서는 교대를 급방 마친 기계가 갑자기 멈춘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금순 1963, 94). 원인을 조사해 보니 너트가 풀려있는 것도 모르고 직포공이 기계를 돌렸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이 초래할 노동 강도의 변화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너트를 풀어놓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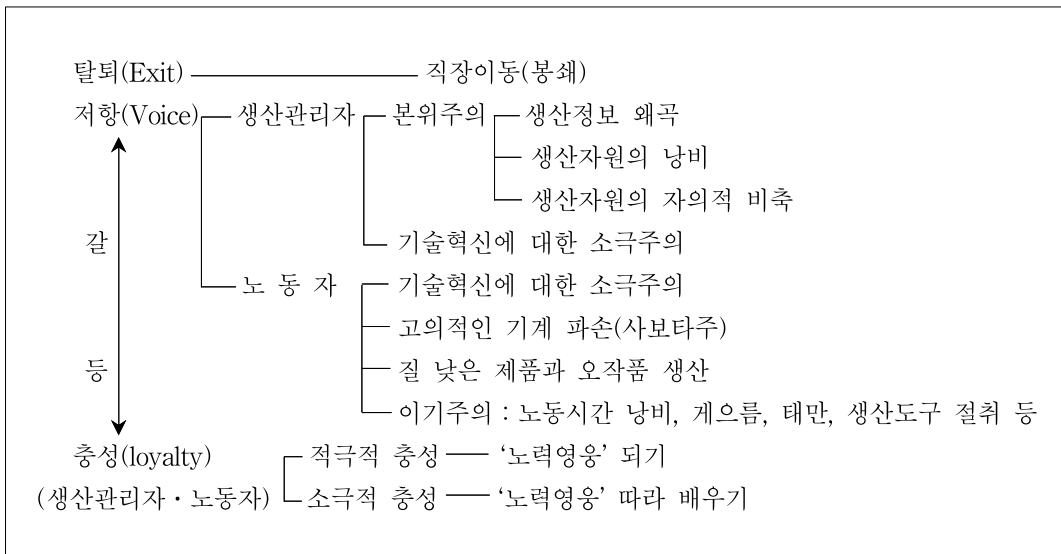
셋째, 노동자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저항은 질 낮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오작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도 표출되었다. 생산자재가 턱없이 부족해 돌격식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생산계획을 일정에 맞춰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산품의 질과 완성도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생산품의 질적 저하와 오작품의 생산은 과도한 노동 강도 하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일반 노동자들은 이기주의 성향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기주의 경향은 작업장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었다. 우선, 이기주의는 상급자가 지시한 일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으로 표출되었다. 평안북도 희천군 천리마 상서상점의 사례를 보자. 상점 책임자 홍화전은 경성경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원들의 퇴근시간을 늦추어가면서 그날 판 것은 그날 바로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판매원들은 지시에 따르기는 하였지만 성의껏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정명진 외 1966, 179-180). 판매원의 입장에서는 경성경리를 잘 한다고 해서 질 좋은 물건이 상점에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임과 인센티브가 향상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는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경향으로도 표출되기도 하였다. 평양제사공장 길확실 작업반에서 있었던 사례이다. 길확실은 작업반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신입 노동자 한 명을 작업반원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신입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계획과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 바쁘게 일을 해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빗자루질 조차 하지 않았다

고 한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는 다른 작업반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 생산도구 등을 절취하는 경우로도 표출되기도 하였다. 역시 길확실 작업반의 사례이다. 신입 여성 노동자 강제옥은 자신의 얼레가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고쳐 쓰지 않고 다른 작업반의 얼레와 슬쩍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길확실 1961, 16-17).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행위를 유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시와 명령에 대한 생산현장 구성원들의 반응유형



## V. 공식 사회관계의 균열

공업화시기의 북한의 생산현장은 체제의 의지가 철저하게 담지되는 수동적인 영역이 아니었다. 생산현장은 상부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다양한 행위주체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행위주체를 둘러싼 현실적 조건들에 의해 다양한 행위가 표출되는 삶의 구체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취사선택할 줄 아는 능동적인 행위자였다.

공업화시기에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갈등과 저항의 행위들이 표출되었다는 것은 북한체제가 공식 사회관계와는 다른 어떤 원리에 의해서도 작동되는 비공식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sup>18)</sup> 비공식 영역은 위계적 명령체계와 노동의 도덕화로 무장된 공식 사회관계 속에서는 주어진 생산과제를 완수하기 어려웠던 생산현장의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업화시기

18)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식 영역과는 다른 조직 원리에 의해 작동되었던 비공식 영역에 대해 헨키스(Hankiss, 1988)는 ‘제2사회’(second society)로, 서재진(1995)은 ‘또 하나의 사회’로 명명한 바 있다.

의 북한 노동자들은 단순히 지시와 명령에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노동일상이 능동적인 영역으로 진화해 갈수록 공식 사회관계는 균열되었다. 그리고 계획경제체제는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왜곡되어 갔다. 노동자들은 공식규범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개인적 안면관계, 공모, 흥정, 뇌물공여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비공식 영역의 확대가 북한체제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공식 사회관계의 확산은 생산관리자와 상부기관의 간부 그리고 생산관리자와 노동자 사이에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던 경제적 공모관계를 구조화시켰다. 공모는 주로 생산실적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생산관리자는 혁신을 통한 모험보다는 보유한 자재와 노동력을 ‘인해전술’ 방식으로 투입함으로써 계획과제를 완수하는 현실적인 방식을 선호하였다. 혁신 노동자들은 창의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부기관에 신소하였지만 상부기관 역시 기술혁신으로 더 많은 계획과제를 할당받는 것을 두려워해 신소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산관리자와 상부기관 간부 간에는 주어진 생산과제의 완수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로 은밀하게 공모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모관계는 생산관리자와 노동자 간에 더욱 구조화되어 있었다. 만성화된 자재부족 상황 때문에 계획대로 질 좋은 완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질 낮은 제품과 오작품의 생산은 생산관리자가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생산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당과 상부의 계획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필요한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노동력 또한 부족한 현실에서 일단 주어진 생산과제만이라도 달성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제품의 질과 완성도까지 고려해 가면서 노동자들을 다그치기 어려웠다. 생산관리자가 질 낮은 제품을 생산실적에 포함시켜도 상부기관에서는 품질 감독원에게 “웬만하면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압력”(김일성 1990, 13)을 행사하곤 하였다. 왜냐하면 상부기관 역시 당에서 지시한 생산과제를 수치상으로나마 완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19)</sup>

일반 노동자들 역시 생산관리자의 현실인식에 암묵적으로 순응하기도 하였다. 생산관리자들은 노동과 일상에서 물질적 대가와 사회적 편익을 현장에서 제공해 주는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생산현장의 노동관계에 의해 결정되었고, 노동관계는 생산현장이 당면한 현실에 따라 변화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기술혁신을 반대하는 생산관리자를 정면에서 비판하기 어려웠다. 또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보수와 복리후생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생산과제를 가져올 기술혁신에 열성을 보일 필요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은 기술혁신에 소극적인 관리자와 암묵적으로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생산자재의 비공식적인 거래가 일상화되었다. 만성적인 생산자재의 부족으로 생산현장은 필요한 물자를 계약이 아닌 생산현장 간의 흥정을 통해 직접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자재

19) 공모관계는 북한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은 아니다. 스탈린 시기의 소련에서도 생산관리자와 노동자들 간의 공모관계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왜곡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련의 생산현장에서 나타났던 생산관리자와 노동자들 간의 공모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ltzer(1986, chapter 6, 8) 참조.

를 확보하기 위한 관건은 안면관계였다. 안면관계가 얼마나 폭넓으나에 따라 자재확보의 성공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블라트(blat)'<sup>20)</sup>라 일컫어지는 안면관계를 통한 비공식적인 생산자재의 거래는 자재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간에 흥정을 일상화하였다. 필요한 자재를 흥정을 통해 확보할 때 중요한 것은 뇌물이었다. 아무리 필요한 자재가 다른 생산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자재를 보유한 공장의 자재담당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서는 자재를 제공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일성(1984d, 635)은 뇌물공여를 끊임없이 비판하였지만 뇌물 없이는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공업화시기의 현실이었다.<sup>21)</sup>

이와 같이 생산자재의 비공식적 거래는 생산관리자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재수급의 업무까지 떠맡도록 하였다. 공식적인 계획수행 구조에서는 당에서 모든 자재를 제공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식계획수행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는 직접 자재를 구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다. 안면관계를 통해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로비스트로서 '톨카치(tolkach)'가 필요하였다. 김일성(1987, 25)은 "지금 큰 공장, 기업소들이 있는 지방에는 자재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려관방이 모자란다"라고 지적할 만큼 공업화시기에 자재를 구하러 다니는 톨카치는 어느 생산현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모습이었다.<sup>22)</sup>

생산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생산 활동보다는 원료, 자재, 부속품 구입과 같은 잡다한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관리자의 생산현장 방문시간이 줄어들자 생산현장에서 정보가 왜곡되어도 관리자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상부기관에서는 관리자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확인절차도 밟지 않고 당의 최종 계획기관에 보고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다보니 당에서 작성되는 생산계획이 생산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김일성 1981b, 483).

자재공급체계의 혼란으로 생산공정이 빈번하게 중단되자 노동수첩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1954년에 시행된 노동수첩 규정은 모든 노동자들의 인적사항과 직장이동, 출결근상황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또한, 노동수첩에는 노동자들이 매일 일한 내용과 계획완수 여부를 작업반장이 직접 기록하고 확인도장을 찍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에 자재를 구하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노동수첩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해도 노동일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일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시간의 손실과 노동규율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노동행위를 도덕적으로 규범화하기 위해 생산현장에 강요된 공산주의 생활윤리가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확산되었다. 물질적 인센티브와 복리후생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

20) 블라트(bla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rliner(1957, 181-206)와 Ledeneva(1998) 참조.

21) 1960년대 초 대안의 사업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분수령」은 뇌물을 요구하고 상납해야만 필요한 자재를 얻을 수 있었던 공업화시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림제성 1989, 161-178).

22) 소련에서도 탄광과 같은 대규모 생산현장에서는 보통 10~12명가량의 전문적인 톨카치를 따로 두고 있었다고 한다(Berliner 1957, 207-230).

자들은 어려운 노동을 하지 않으려 하였고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는 ‘날라리’도 부렀다고 한다(김정일 1995a, 22-27).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노동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동노동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혁신과 증산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노동자들은 노력영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노동의 강도만 높이고 물질적 대가와 노동 및 생활환경은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김정일(1995b, 123)은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만 노동자들이 흥겹게 일할 수 있고 생산의욕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구호만 생산현장에 나부낄 뿐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노동과 복리후생의 교환이 균등하지 못한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현실이었다.

북한은 노동의 모든 구체적인 형태와 유용한 속성을 사상시켜 그들의 목적의식성에 철저히 대상화시켰지만 생산현장의 현실은 오히려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양심은 노동과정에서 점차 약화되었다. 사회주의 노동질서와 규칙은 생산현장에서 탈규범화되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계획수행은 공식 사회관계에서 벗어나 계획외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노동의 실제 주체로서 노동자들은 공식 사회관계 속에서 결박되었던 개인주의적 양심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사회주의적 양심의 울가미를 풀고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이다.

넷째, 공식 사회관계가 균열되면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였다. 특히,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의 강도가 강한 직종에 사회적 편견이 발생하였다.<sup>23)</sup> 직장 배치가 노동자 개인의 의사와 소질 및 능력에 기초하지 않고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거해 배치되다보니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렇다보니 중화학공업과 탄광, 단순 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결혼상대로서 여성들에게 인기도 없었다고 한다(리택진 1982, 251-252).

## VI. 맺음말

북한의 공식 사회관계는 전쟁 직후 건설과 증산이라는 경제적 목적 때문에 출현하였다. 북한은 공업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적 명령체계를 전사회적으로 구축해 생산현장을 정치적으로 통제하였다. 중앙집권적 명령체계가 확립되어야만 체제의 의도와 목적에 생산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을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동일상은 체제의 의도와 목적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 각종 통제기제에 의해서 엄격히 감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시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어려웠다. 또한 자본주의체제와

23) 다음의 소설들에는 공업화시기 중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하정희(1978, 99); 강복래(1979, 30); 리택진(1982, 251-252); 엄휘철(1983, 39).

달리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물질적 대가와 사회적 편익을 당이 독점적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당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체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당의 지시와 명령을 공식 사회관계의 틀 속에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비공식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글은 북한의 공업화시기에 공식 사회관계와 다른 비공식 사회관계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었던 비공식 영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미 공업화시기부터 비공식 영역은 노동일상에서 또 다른 작동원리로 서서히 구조화되어 가고 있었다. 비공식 영역이 노동일상에서 구조화되어 감에 따라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은 공적 원칙의 준수보다는 비공식적인 원칙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서 노동의식의 변화는 북한체제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바로 충성의 정치관계를 약화시켜 체제옹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까지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와 당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신념화가 내면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그러한 신념화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과 보상이 적을 경우 신념화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북한이 비공식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을 처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중앙집권적 명령체계의 약화가 초래할 정치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생산현장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생산자원을 외부로부터 수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분배와 생산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생산현장에 위임해야 한다. 또한, 생산현장들이 제도적 틀 속에서 상호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도록 합리적인 동의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명령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비공식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을 처방하는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북한의 권력집단은 아래의 경제적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앙집권적 명령체계를 약화시킬 경우 초래될 정치적 변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공업화시기의 유산인 비공식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방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경쟁과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합의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명령체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1981년 6월 27일 개막된 중국의 제11기 제6중전회에서 채택된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이하 ‘역사결의’)를 체제의 생존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등소평은 ‘역사결의’를 통하여 문화대혁명으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모택동에 있었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모택동의 중국혁명에 대한 공적은 문화혁명의 과오를 능가한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이 중국의 ‘역사결의’가 김정일 정권에 주는 교훈이다. 등소평이 ‘역사결의’를 통해 모택동을 비판적으로 계승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김정일도 김일성의 정치리더십을 비판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 참 고 문 헌

- 강복례(1979). “공장의 주인들.” 『조선문학』 . 8호(382).
- 강성국(1963).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할 때만이.” 정충화 편저. 『천리마작업반(4)』 .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 강태정(1977). “한계점.” 『붉은 노을 비껴온다』 . 평양: 문예출판사.
- 고금순(1963). “전체 반원이 기대 운전공이며 수리공으로 일한다.” 정충화 편저. 『천리마작업반(4)』 .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 김광용(1995).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길확실(1961).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 .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 김경숙(1990). 『공산주의생활철리』 .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성태(1965). “현물평가제의 본질과 우월성.” 『근로자』 . 11월 (상), 제21호(283).
- 김연각(2006). “북한 국가의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북한연구학회보』 . 제10권 제2호.
- 김연철(1995).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성균관대학교 정치학박사논문.
- 김일성(1980).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1953.12.8).” 『김일성저작집 8』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1a).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1958.9.16).” 『김일성저작집 12』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1b). “새 환경에 맞게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 데 대하여(1961.12.16).” 『김일성저작집 15』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2).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1964.12.19).” 『김일성저작집 18』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3a). “농촌에 여러 가지 상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1967.1.11).” 『김일성저작집 21』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3b). “공화국정부의 10대 정강을 집행하기 위한 내각의 과업에 대하여(1967.12.18).” 『김일성저작집 21』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3c).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69.2.11).” 『김일성저작집 23』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3d).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70.11.2).” 『김일성저작집 25』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4a). “함경북도 당 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경제 과업에 대하여(1972.6.16).” 『김일성저작집 27』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4b). “새로 배치된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 사로청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1972.12.16).” 『김일성저작집 27』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4c).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1973.1.17, 22-24).”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4d). “올해 사업총화와 다음해 사업방향에 대하여(1973.12.31).”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7). “정무원 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1980.3.5).”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90). “품질감독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81.2.2).” 『김일성저작집 3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원석(1980). “생산의 정상화와 인민경제 계획화사업.” 『근로자』. 제1호(453).
- 김정일(1995a). “로동행정규율을 강화하며 금요 로동에 적극 참가하자(1978.1.5).”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1995b).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1978.8.1).”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희(1971).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필수적 요구.” 『근로자』. 제7호(352).
- 김중욱(2007). “북한의 정치 변동과 ‘일상의 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1호.
- 남근우(2008). “북한의 복종과 저항의 정치: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공식 사회관계 (1950-70년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리석형(1962). “평로 앞에서.” 『보람찬 나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 리석형(1969). “빛나는 세대(4회).” 『조선문학』. 제8-9호(264-265).
- 리택진(1982). 『용해공들』. 평양: 문예출판사.
- 림재성(1989). 『분수령』.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막스 베버 저(1981). 『지배의 사회학』 (김종우·김남석 공역). 서울: 한길사.
- 박형중(2002).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1970)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1973).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재진(1995).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 스즈키 마사유키(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 서울: 중앙일보사.
- 엄휘철(1983). “밝은 얼굴.” 『진망』. 평양: 문예출판사.
- 이종석(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장춘옥(1979). “미래에 사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평양: 문예출판사.
- 정건화(2007). “북한 노동자의 존재양식: 탈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양문수의 지음. 『북한의 노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명진·김인호(1966).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를 깨달았을 때.” 박윤근 편집. 『천리마시대 사람들(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정우근(1997). “북한식 체제의 형성과정.” 한국정치학회 1997년도 4월 월례발표회.
- 정창윤(1983). “혁명 소조원 김동무.” 『시대의 전위들』. 평양: 문예출판사.
-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2008).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 차문석(2007).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인민의 생활.”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생활』. 북한인권토론회.
- 차문석(2008). “북한 노동 일상의 세계와 접근방법.”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
- 최덕수(1963). “나라의 참다운 살림꾼이 되기 위하여.” 정총화 편저. 『천리마작업반(4)』.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 최 성(1997). 『북한정치사: 김정일과 북한의 권력엘리트』. 서울: 풀빛.
- 하랄트 테네(2002). “일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섰는가?.” 알프 뤼트게 외 지음. 『일상사란 무엇인가』 (나중석 외 옮김). 서울: 청년사.
- 하정희(1978) “생활.” 『조선단편집 3』. 평양: 문예출판사.
- 허춘식(1986). 『야금기지』. 평양: 문예출판사.
- 홍 민(2006).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M. 마페졸리·H. 르페브로 저(2002).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일상생활연구회 편). 서울: 한울아카데미.
- Berliner, Joseph S(1957). *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 Djilas, Milovan(1957).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New York: Praeger Publisher.
- Filtzer, Donald(1986).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 1928-1941*. London: Pruto Press.
- Filtzer, Donald(1992). *Soviet Workers and De-Stalinization: The Consolidation of the Modern System of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53~1964*.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kiss, Elemer(1988). "The Second Society: Is There an alternative social model emerging in Contemporary Hungary?." *Social Research*. No. 55.
- Jowitt, Kenneth(1992). *New World Disorder: The Leninist Extinc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rnai, Janos(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Ledeneva, Alena V(1998). *Russia's Economy of Favo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der, Andrew G(1986). *Communist Neo-Traditioan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 A Study on Complications Appeared on the Production Field in North Korea - the Industrialization era -

Keun-Woo Nam\*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focus on everyday labour of North Korea that appeared on the research field in the 50s to 70s when the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originated. For this purpose, try to recover the importance of acts of common people in North Korea such as production managers, labourers, and farmers who usually ignored in researches in South Korea so far. Up to today researches on North Korea had tendency to focusing too much on the inspection and control system of the country which designed to reinforce the hierarchical command system, therefore made image of North Korean people as passive individuals who regarded no free will and choice. But the daily routine labours of production field are not the passive area as it seems, it is rather specific spot of the life that various actions represented influenced by realistic conditions of the scenes of labour. Therefore, North Korean is active factor of society who chooses their actions by their wills not passive robotic people only follows orders of authorities. And various indications of active actions were already showed confidentially several places from the industrialization era.

■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07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0일